

문대통령 지지율 43.9% 재하락세...민주 35.1% 통합 34.6%

긍정평가, 2.5%p 하락...부정평가 3%p 올라 52.4% 공·부정 평가 8.5%p로 한 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女·30대·중도' 주로 이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부정평가가 상승하면서 지난 주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던 공·부정 평가 격차가 한 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뢰로 실시한 8월1주차(3일~7일)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2.5%포인트 내린 43.9%(매우 잘함 25.0%, 잘하는 편 18.9%)로 나타났다. 10일 밝혔다. 지난주 46.4%를 기록하며 5월 3주차(62.3%) 이후 10주 만에 반등했지만, 한 주 만에 지지율이 다시 꺾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52.4%(매우 잘못함 37.7%, 잘못하는 편 14.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7%포인트 감소한 3.6%였다. 부정평가가 상승하며 공·부정 평가 차이는 8.5%포인트를 기록하며 한 주 만에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였다. 7월5주차 조사(긍정 46.4%, 부정 49.4%, 3%p차이)에서는 3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이 같은 하락세는 부동산 대책 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이 시행됐지만 여권 의원들의 '월세 대세' 등 발언 논란이 불거지고 지난 4일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지역 구 의원과 단체장 등의 반발로 그

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부동산 과장 영향이 가장 크다"며 "부동산 이슈가 전방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월세 전환에 따른 이른바 '월세 포비아'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도층도 그동안 부정 평가보다 긍정 평가가 높았지만 지난주 부동산 이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부정 기류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주 있을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 하는데 이것이 지지율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대구·경북(12.5%p↓, 42.2%→29.7%, 부정평가 64.3%), 광주·전라(4.2%p↓, 70.9%→66.7%, 부정평가 30.7%), 경기·인천(3.7%p↓, 49.5%→45.8%, 부정평가 50.7%), 부산·울산·경남(3.1%p↓, 38.4%→35.3%, 부정평가 60.8%)에서 주로 하락했다.

반면 서울(3.3%p↑, 39.8%→43.1%, 부정평가 53.7%)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 30대(6.0%p↓, 53.3%→47.3%, 부정평가 51.4%), 70대 이상(3.5%p↓, 39.6%→36.1%, 부정평가 57.2%), 20대(3.4%p↓, 43.7%→40.3%, 부정평가 52.3%), 40대(3.2%p↓, 55.5%→52.3%, 부정평가 45.0%)에서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4.7%p↓, 76.1%→71.4%, 부정평가 25.2%), 중도층(3.7%p↓, 41.6%→37.9%, 부정평가 59.8%)에서 떨어졌고 보수층(5.3%p↑, 19.8%→25.1%, 부정평가 73.0%)에서는 상승했다. 또 직업별로 자영업(7.4%p↓, 44.7%→37.3%, 부정평가 59.6%), 농림어업(5.6%p↓, 49.3%→43.7%, 부정평가 55.1%), 사무직(5.1%p↓, 51.5%→46.4%, 부정평가 51.0%), 노동직(4.3%p↓, 48.8%→44.5%, 부정평가 52.0%)에서 하락했고, 고무직(5.7%p↑,



41.3%→47.0%, 부정평가 45.2%)에서는 상승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7월 5주차 주간집계 대비 3.2%포인트 내린 35.1%, 미래통합당은 2.9%포인트 오른 34.6%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0.1%포인트 내린 4.8%, 열린민주당은 0.2%포인트 오른 4%, 국민의당은 1%포인트 내린 2.6%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7월 5주차 대비 0.9%포인트 상

승한 16.0%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18세 이상 유권자 5만5923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20명이 응답을 완료해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뉴스시스

'사의 표명' 김조원 민정수석, 靑 수보회의 유일 불참

사퇴 결심 굳힌 것 해석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일괄 사의 표명 때 이름을 올렸던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참석해야 할 회의에 불참한 점으로 볼 때 이미 스스로 사퇴의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설명하고 확고한 정책 의지를 국민들에게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진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수석을 제외하고 노 실장과 함께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은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의 불



참에 관해 "(외부에) 알려진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사표 수리 때 김 수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윤도한 소통수석 등 일부 사표를 선별적으로 우선 수리한 뒤 김외숙 인사수석과 노 실장 수순으로 점진적 퇴진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 수석은 송파구 잠실동 갤럭시 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과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30평형(전용면적 84㎡) 등 서울 노른자 지역에만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소 2억원 이상 비싸게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며 애초부터 처분 의지가 없던 게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됐다. 김윤호 기자

與 "수해 기간 회식 금지...복구 현장서 의전 요구 말라"

의원 행동 단속 "현장에 절대 언론 대동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소속 국회의원들의 휴가를 반납하고 지역위원회별로 회식 금지령을 내리는 등 '행동 거지 단속'에 나섰다. 최근 수해 와중에 일부 의원들의 술자리 사진이 논란에 휩싸인 데다가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인증샷'을 찍는 행위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자제령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호우 피해 기간 의원

단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소속 의원 전원 휴가를 반납하고 지역위원회별로 현장에 대기하도록 했다. 이어 지역위 차원에서 상황 조치 및 수해복구 활동에 나서거나 시군구 차원의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때 현장에서 의전 혹은 언론을 대동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회식 및 주민 모임을 금지하고 당 비상연락망을 항상 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속 의원들의 8월 세비 중 일정비율을 복구 성금으로 기부하는 모금안도 의결했다. 회식 금지는 최근 김부겸 당대표 후보와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가 지역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진 속에서 간배잔을 든 것을 놓고 이른바 '술자리' 논란에 휩싸인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증샷'의 경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경기 안성시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작업을 한 뒤 현장 사진을 올린 것이 빈축을 사자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수해'로 연기된 민주당 전남도당 대의원대회 19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 지역 수해로 인해 연기했던 도당 대의원대회를 오는 19일 오후 2시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 대강당

에서 열기로 중앙당과 협의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상무위원회를 열어 의원들간 합의

추대한 김승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뽑을 예정이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합동 연설회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